
2017년 업무 추진계획



국가기록원

|| 목 차 ||

I . 정책여건 및 개선방향	1
II . 2017년 중점 추진과제	3
1. 디지털 행정환경의 변화 대응을 위한 전자기록관리 기반 구축	5
2.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록정보 자원화	6
3. 기록한류 확산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	9

I . 정책여건 및 개선방향

정책 여건 및 개선 방향

지난 4년간 주요성과

- 「2016 세계기록총회*」 성공적 개최를 통한 기록한류 확산
* '16.9.6.~9.9.(4일간) 114개국 2만5천명(외국인 786명), 59개국 256편 학술발표, '서울선언문' 채택
- 종이기록 ⇒ 전자기록관리체계*로 전환
* 행정기관 기록관리시스템 보급완료('13년, 738개 : 중앙176, 지자체245 등)
- 주요 기록물*의 체계적 수집·정리로 기록정보의 자원화('13년~'16년)
* 공공기록 : 문서 609만 권(전자기록포함), 시청각 49만 점, 간행물 10만 권 등
* 대통령기록(17대) : 문서 103만 건, 시청각 141만 건, 웹기록 513만 건, 행정정보 330만 건 등
- '온라인' 열람 가능한 기록관리 원문서비스 확대*
* ('13년) 360만 건 → ('14년) 569만 건 → ('15년) 943만 건 → ('16년) 1,463만 건

추진상 문제점

-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준비 및 선제적 대응 미흡
 - 클라우드 등 행정업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록관리 방안 부재
 - '행정데이터세트' 기록관리 미비로 빅데이터 기록 유실 및 활용 곤란
- 미디어 특성에 맞는 콘텐츠, 이용자 계층·수준, 서비스의 다양성 등 수요자 맞춤·공감형 기록문화서비스 제공 부족
- ICA, EASTICA, 개도국 위주의 소극적 소통 및 실질적인 액션플랜 부재로 국제사회와의 소통 및 네트워크 구축 미흡

개선 방향

- 「공공기록물법」 및 시행령, 「기록관리 표준」 개선, '차세대 전자기록 관리모델' 마련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 마련
- 수요자 요구를 콘텐츠로 개발, 전시·교육 및 정보 서비스 방식 고도화
- 「UNESCO」, 「국제청방패위원회」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체계 구축, 선진 IT기술 협력을 통한 기록관리체계 확산 추진

Ⅱ . 2017년 중점 추진과제

추진체계

비전

**기록문화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
선진기록관리체계 구축**

목표

디지털 행정 환경변화
대응을 위한 전자기록
관리기반 구축

국가 경쟁력 강화를
위한 기록정보의
자원화

기록한류 확산 및
글로벌 네트워크 구축

실천
과제

- 클라우드 행정 환경에 맞게 관련 법·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
- 행정데이터세트 등 빅데이터 관리모델 및 장기보존·활용 기반 마련
- 전자기록 시대를 선도할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적 역량 강화

- 가치 중심의 기록물 수집으로 기록정보의 자원화 추진
- 기록콘텐츠·원문 서비스 확대로 국민공감 확산 및 협업 강화
- 다양한 전시·기록 문화 체험 기회 제공 등 생활 속의 기록문화 확산

- 기록한류 확산·추진방안 수립·시행
- 국제기구와 각국의 협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
- 효율적인 국제교류 협력 수행을 위한 기반 강화

추진
방법

- 국가기록원 연간 주요 정책지표로 설정, 추진력 강화
- 분기별 주요 과제별 세부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
- 국가기록원 자체 성과관리과제에 반영, 책임성 강화

과제1

디지털 행정환경의 변화 대응을 위한 전자기록관리 기반 구축

◇ 클라우드 환경, 행정정보시스템 확산 등 행정업무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록관리체계의 적극적 개선 추진

□ 기록관리 법·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

- 공공기록물법령, 기록관리 표준·지침 등 관련 법규 일제 정비
 - * 새로운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전자기록관리 및 장기 보존절차 개선,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 강화 등 ⇒ 공공기록물법 및 시행령 개정, 표준 제·개정
- 「클라우드 기반 기록관리시스템(RMS)*」 구축·운영**
 - * 범정부 협업기반 마련, 시스템 유지비용 절감(5년간 40억) 등 업무효율 극대화
 - ** '16년 시범운영(행정자치부) → '17년 확산(14개 부처) → '18년 완료(32개 기관)

□ 차세대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및 장기보존 기반 마련

- 클라우드 등 새로운 IT환경에 부합하도록 업무절차 진단 및 재설계*
 - * IT, 기록학 등 원내·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최적의 결과 도출
- 시·도 새울, 특허넷 등 행정정보시스템에 적합한 기록관리* 모델 마련
 - * 행정정보데이터세트(중앙부처 2,200여 개)의 생산·활용·장기보존 등 효율적 관리체계 설계
- 각종 전자기록 장기 보존을 위한 「기술정보 DB 관리시스템*」 개발
 - * 구동 S/W, 파일포맷 등 전자기록 장기보존 및 활용에 필수적인 정보 구축·활용

□ 전자기록 시대를 선도할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적 역량 향상

- 직무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(연 6회)
 - * (초급)기초역량 → (중급)기록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 → (고급)실무적용 및 시스템 활용
- 디지털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전자기록관리 실무역량* 제고
 - * 전자기록 이관실무 및 품질관리, 기록관리메타데이터 적용, 기록관리시스템 실습 등
- 디지털 정보 전문분야 교육 내실을 위한 관계기관*과 협조 강화
 - * 행자부(전자정부국), 통합전산센터(빅데이터분석과), 한국정보화진흥원 등

- ◇ 공공기록물의 지식정보 자원화로 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
- ◇ 축적된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로 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도 제고

가. 가치 높은 기록물 수집으로 기록정보의 자원화 추진

□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정리

- 중앙행정기관 등 생산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 수집
 - ※ 전자문서('06년 생산분) 약 381건, 비전자문서·시청각기록물 등 약 10만 권

《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: 총 1억2천만 건 》

- ▶ 공공기록물(9천9백만 건) : 문서(9,740만 건), 시청각(140만 건), 간행물(28만 건) 등
- ▶ 대통령기록물(2천만 건) : 문서(276만 건), 시청각(249만 건), 웹기록(1천만 건) 등

- 역대 정부 주요 인사·해외소재 한국 관련 기록물 수집
 - ※ 전직 총리 역임 인사, 3.1운동 관련 기록 등 4만 매
- 수집 기록물의 입력, 스캐닝 등 정리사업(19만 권) 후 온라인 서비스

□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관련 역사 기록물 기획수집

- (공공기관) 지자체 보유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현황조사 및 수집
 - 국가보훈처와 협업, 공동 수집 및 독립운동가 발굴 지원 등
 - ※ 3·1운동 당시 즉결심판으로 처분된 경우 범죄인명부에만 기재(옥천군 등 60여개 지자체 보유), 향후 동 기록물 조사를 통해 새로운 독립운동가 발굴 예상
- (민간) 보훈단체 등 민간 기록물 수집,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관리
- (해외) 러시아·미주·유럽지역 3·1운동 관련 소재정보 조사 및 수집

나. 기록콘텐츠·원문서비스 확대로 국민공감 확산

□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기록문화 서비스 내실화

- 「영상기록으로 보는 문화생활사*」 등 콘텐츠 개발(7개), 온라인 서비스
 - * 국립영화제작소의 가족계획, 문맹퇴치 등 각종 홍보영화를 시대·주제별로 소개
- 「이달의 기록」, 「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」, 「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」 등
 - ※ '16년말 현재 총 63개 기록콘텐츠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중
- 근·현대사 관련 기록 화보집·해설집 편찬·배포
 - 『3.1운동 100주년 기념 자료집』 [17년 I 권(무단통치 관련 기록), '18~'19년 II 권(판결문)]
 - 『정책기록 해설집(교통·교육 편)』, 『기록과 테마로 보는 대한민국(생활 편)』 등

□ 기록물 원문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

- 원문(공개기록) 서비스 대상 확대[16년 1,473만 건 → '17년 1,913만 건 (디지털화된 공개기록물의 95%) → '18년도까지 완료]
 - ※ 지적원도, 각종 업무계획, 정책 자료집 등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 가능
- 서비스 범위 확대(행정기록중심 → 역사기록물, 시청각 등)로 방송·출판·연구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 촉진

□ 행정기관용 「바로검색 열람서비스」 실시('17년 하반기 ~)

- 수요기관*이 국가기록원 기록을 직접 검색·활용토록 시스템 개선, 업무처리 기간 단축(10일 ⇒ 즉시) 및 비용 절감
 - * 보훈 관련(국가보훈처), 수사·재판 관련(법원, 검찰·경찰) 등 우선 실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

다. 생활 속의 기록문화 확산

□ 국가기록전시관의 지역의 문화·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

- 「실록의 숲*」 조성 등 기록전시관을 역사·문화·관광 명소화
 - * 실록을 보관중인 부산기록관을 테마공원화(실록문화체험, 표지석 아카이브 등) 추진
- 소장 기록물을 활용한 다양한 기록 전시회 개최
 - 「대통령기록관 설립 10주년」 특별전(10월)
 - 「'50~'90년대 학창시절」 기획전(10월)

□ 참여형 기록문화 프로그램 확대·운영

- 청소년(자유학기제*, 체험교실 등) 대상 프로그램 확대 추진
 - * 대통령기록관, 서울·부산·대전기록관에서 '15년부터 시행('15년 5,315명 → '16년 8,207명 ⇒ 17년 10,000명 이상)
 - ※ 지역아동, 다문화가족, 농어촌 벽지학생 등 '문화소외 계층' 견학도 별도 실시
- 국민참여형 기록문화[기록사랑 백일장*(5월), 기록문화탐방(9월) 등] 프로그램 활성화 및 우리 고장 기록문화 발굴·확산(기록사랑마을**) 적극 지원
 - * 대전, 성남, 부산, 광주 등 4개 지역 동시 개최, 4,000명 참석(예상)
 - ** '08년부터 9곳 지정·운영 중(정선 함백역, 파주 파주마을 등), 추가 1개소 지정 및 내실화

□ 민간 보유 주요 기록물의 복원·복제 서비스 제공

- 근·현대 역사기록 등 국가적 보존관리가 필요한 기록물 중 훼손이 우려되는 종이·시청각물의 복원·복제 지원
 - ※ 기관/종이기록물 중심(200점) → 민간/시청각물(영상·오디오)로 확대(800~1,300점)

과제3

기록한류 확산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

- ◇ 「2016 세계기록총회」로 입증된 한국 기록관리체계의 우수성을 「기록한류」로 확산하기 위한 아이템 발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

□ 「기록한류」 확산 방안 수립·시행

- 거점국가(인니 등 2~3개국) 선정, 기록관리기술 보급의 베이스캠프화 추진
 - ※ 전자정부 해외진출지원사업(세르비아 등), 공공행정협력단(인니, 중남미 SICA 등) 참여, 거점국가 초청 및 방문을 통해 협력 논의
- 기록관리 분야의 「한류 아이템」 발굴·지원(연구용역)
 - ※ 전자기록관리체계(시스템·시설·장비 등), 한지보존·복원기술 등 수출 통로 개척

□ 국제기구와 각국의 협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추진

- 「UNESCO 세계기록유산 센터」 설립 추진(~12월)
 - ※ 관계기관 협의(1월) → 설립의향서 제출(2월) → UNESCO 집행이사회 및 총회 의결(10~11월) → 정부 간(행자부↔유네스코) 협정서 체결(12월)
 - ※ 설립 지지를 위한 UNESCO 세계기록유산 25주년 행사 시 워크숍 참여(5월, 말레이시아)
- ‘국제청방패 한국위원회’ 공동 창립(2월) 및 활동 추진(~12월)
 - * 문화유산 보존 및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공동위원회(국제박물관협의회, 세계기록관리협의회, 국제도서관협회,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)로서 국가기록원은 기록 분야의 한국대표로 활동 예정
- 전자기록 관련 국가 간 회의체(A5)* 구성 준비
 - * 후보 국가(호주, 중국, 일본, 프랑스, 독일 등 기록관리 선진국) 선정 및 회의체 활동 협의
- 한국정부 대표로 ICA 프로그램위원회(PCOM*) 위원 활동(2016년~2020년)
 - * PCOM : ICA에서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 프로그램 정책개발 및 예산지원방안 결정

□ 효율적인 국제 교류협력 수행을 위한 기반 강화

- KOICA 등 ODA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
- 기록관리분야 기획·점검 등 기록원의 관련 기관간 협력·조정기능 강화
- 「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」 운영을 통한 국제교류 강화
 - 자체추진, 「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*」 운영(6월) * (대상)거점국가 2~3개국
 - KOICA연계, 「국제 기록문화유산 관리 역량강화(아시아) 과정*」 운영(9월)
 - * (대상)인도네시아, 네팔, 스리랑카, 라오스, 미얀마 등 5개국 20명(다년간과정, '17~'19년)